

## 광주, 가뭄·홍수·폭염 '안심도시' 만든다

워터그리드로 '동북댐 더하기' 프로젝트 추진 계획  
 홍수취약지구 12곳 선제적 정비...침수 예방시설 설치

광주시가 기후위기에 공동대응하기 위한 가뭄·홍수·폭염 대책을 발표했다.  
 강기정 시장은 12일 오전 청사 중회의실에서 '가뭄·홍수·폭염 안심도시 조성계획'을 발표했다.  
 강 시장은 "지난 5월 평년수준을 웃도는 반가운 단비, 가뭄대응을 위한 행정의 사전비상행동, 10%가 넘는 절수효과를 보인 시민 참여로 50년 만의 가뭄 위기를 시민들과 함께

극복했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일상의 많은 불편을 감내하고 절수운동을 위해 함께 노력해 준 시민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강 시장이 밝힌 가뭄 대책은 우선 워터그리드(연결)로 '동북댐 더하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번엔 구축한 5만여 원의 예산을 투입

10만t으로 확대하고 2030년까지 강변여과수 10만t 개발, 농업·생활용수 연계 11만 등 워터그리드를 통해 30만t 이상의 수원을 확보해 나가겠다는 설명이다.  
 긴급누수탐사 30억, 노후상수관 정비 997억, 블록시스템 356억 등을 투입하는 노후 상수도 현대화사업도 2026년까지 추진, 현재 누수를 5.7%를 2026년까지 2.5%로 낮춘다.  
 생활 속 시민 참여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확대 추진한 녹색야파 트사업도 지속하면서 환경·교육도시 지정을 통한 생애주기별 환경교육과 생활속 실천사업도 강화한다.  
 앞서 광주시는 가뭄대비 수돗물

안정공급 대책 수립을 시작으로 가뭄 심각단계에 준한 사전비상행동계획을 선포, 영산강 비상급수 5만t 취수, 동북댐과 주암댐 용수사용량 조절, 동북호 주변 신규 관정 53공 개발과 담양 외동저수지 동북댐 방류 등 다양한 비상 대책을 추진했다.  
 시민들의 물절약 유도를 위해 추진한 물절약 요급감면제 시행으로 2022년 11월 4.7%에서 올해 4월 10%가 넘는 절수효과를 봤다. 이로 인해 1일 5만t의 물이 절약됐다.  
 강 시장은 홍수 대책도 발표했다.  
 우선 홍수취약지구 12곳을 선제적으로 정비한다. 우산지구·문흥성당 일원·북구청사거리 일원·신안교

일원 등 상습 침수지역 4곳에 대해서는 우수저류조·펌프장 등 우수저류시설을 769억 원을 투입, 2028년까지 설치한다.  
 문정천·용전천·서방천·대촌천·운수천·황룡강 등 6개 지방하천은 2026년까지 668억 원을 투입, 호안정비·제방축조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노후 하수관로 중점관리지역인 서방천 배수구역과 용봉C·공구의 거리는 2026년까지 399억을 투입해 빗물펌프장 등 침수예방시설을 설치, 집중호우에 대비한다.  
 홍수 감지와 예측 강화를 위해 올해 말까지 도시침수예상지도도를 고도화하고, 2026년까지 ICT 기반 하수도 시설 스마트 관리 체계를 완료한다.  
 강 시장은 도시의 열을 낮추는 근본적 폭염 대책도 제시했다.  
 광주시는 지난 5월 20일부터 폭염

관심 단계를 발령하는 등 오는 9월 30일까지 2023 폭염대책기간을 운영한다. 온열질환 감시·응급구급체계 운영 등 폭염상황실을 운영하는 한편 984명의 전담사회복지사·생활지원사가 독거노인 1만5000명을 대상으로 주1회 방문·안부전화로 추진한다.  
 광주시는 현재 폭염취약계층 1만 8000가구를 대상으로 방문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폭염대응체계를 가동 운영하고 있다.  
 취약계층 중심의 폭염 대책을 넘어 도시의 열을 낮추는 근본적 대책도 마련한다. 도심 쿨스팟 및 바람길 5곳, 가장 시원한 도시사업 5곳으로 도시 열환경을 개선한다.  
 광주시·시의회·전문가·지역주민 등이 함께 디자인하고 조성하는 시원한 마을사업도 내년부터 준비한다.  
 /조선경 기자

## '30년 숙원' 전남권 의대 설립 난항

대한의사협회 '의대 신설 반대'...정원 확대만 잠정 합의  
 전남도 "삶과 직결된 국민·지자체 의견 원천 배제" 비판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과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의료 불모지 전남지역 '30년 숙원사업'인 국립의대 설립에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진통 끝에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방안에는 합의했지만 의협이 또 다시 의대 신설 '절대 불가' 입장을 들고 나왔기 때문이다.  
 12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8일 보건복지부와 의협은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통해 2025학년도 입시에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방안 등에 대해 잠정 합의한 가운데 구체적인 증원 규모와 방법 등은 추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의료 현안을 논의하는 테이블이 가동됐지만 의료서비스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의대 신설에 대해 전남도와 의협은 원천 배제돼 의대 신설을 추진 중인 전남도를 비롯해 경남 창원, 경북 포항, 인천 광역시, 경기 포천·동두천 등 지자체들의 반발이 커질 전망이다.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 의협은 '의사 인력 확대는 의대 신설이 아닌 기존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종전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았다.

의협은 최근 이러한 입장을 담은 의료현안협의체 회의 결과를 회원들에게 서신을 통해 알렸다.  
 의협은 서신에서 "각종 부작용과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공공의대 등 의대신설을 통한 인력확충 논의는 절대 불가하다는 점이 필수적으로 고려되고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복지부에 강조했다"며 "복지부도 이런 전제 사항에 대해 공감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이러한 잠정 합의 내용은 그간 정부와 의협에 필수 의료인프라 확충과 초고령화,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의대 신설 필요성을 꾸준히 촉구해온 지자체들의 반발을 불러오고 있다.  
 전남도의 경우 의대 정원 확대 등 의료현안을 직능단체인 의협하고만 협의하는 데 대해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수혜자 중심의 의료서비스 체계를 만들기 위해선 시민·전문가·지자체 등이 논의과정에 참여해야 하지만 철저히 배제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현재의 의료현안협의체엔 시·도민이나 지자체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통로가 사



'행복동행' 퍼포먼스

12일 오전 화순시니움문화스포츠센터에서 열린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한마당행사에서 김영록 지사와 참석자들이 행복동행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실상 없다"며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 의료 현안을 폭넓게 논의하려면 전문가, 시·도민, 지자체 의견도 충실히 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전남지역에선 민의를 대변한 각종 사회단체들이 나서서 의대 설립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  
 의과대학이 없어 매년 70만명의 전남도민이 타 지역으로 원정 진료를 떠나고 있고, 이로 인한 의료비 유

출만 연간 1조5000억원에 달해 서다.  
 특히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과 상급종합병원이 없어 지역민들이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받기 힘들고 중증·응급환자의 골든타임 내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의대 설립은 시급한 실정이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이러한 절박함을 호소하기 위해 지난 8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나 전남 의대

신설을 촉구했다.  
 당시 김 지사는 "지역의 열악한 의료 현실을 타개할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필수의료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지역 의사제 도입 등 공공성이 담보된 지역 맞춤형 국립 의대 신설'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김 지사는 오는 14일 광주시청에서 열리는 국민의힘 호남권 예산정

책협의에서도 전남 의대 신설을 적극 건의할 방침이다.  
 /김도기 기자

부스/농막/컨테이너 맞춤형 제작

안되는건 없습니다  
원하는대로 제작해드립니다

## MK하우징

설치 예정날짜와 타입만 정해서 연락주세요

타입1. 컨테이너 3x6

타입2. 컨테이너 3x9

타입3. 농막 3x6

타입4. 농막 3x9

타입5. 휴먼부스

맞춤제작

☎ 010-6265-0057